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Online Series

2017. 01. 25. | CO 17-02

신종호(국제전략연구실장)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 대내외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Uncertainty)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국정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요 강대국(G2)인 미중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의 핵심영향 요인인 미중관계는 ‘트럼프 변수’를 맞이하여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이 쉽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발언과 취임 연설 및 외교안보 국정기조 등을 통해 미중관계를 전망하고 이것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 불확실성의 심화와 이익경쟁

이제 막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중국 정책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중국에 대한 전략적 탐색과 견제는 이미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2016년 12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축하 전화를 받음으로써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문제’를 건드렸고, 2017년 1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포함한 모든 것이 ‘협상 대상(under negotiation)’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판하고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경제적 카드를 활용한 중국 견제도 고려하고 있다. 안보분야에서 트럼프는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고, 외교안보 정책결정라인의 인선 역시 대부분 중국에 대한 견제와 관여를 강조하는 강경파 인사들로 구성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전략적 카드를 활용함과 동시에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취임 직후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국정기조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기조 가운데 ‘미국 우선 외교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은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이고, ‘강한 군대 재건(Make Our Military Strong Again)’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두 가지 국정기조는 트럼프가 강조해 온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중국 견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그동안 ‘평화적 발전(peaceful development)’이라는 대외전략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은 유발하지 않겠지만, 자국의 정당한 ‘핵심이익(core interest)’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를 강조함으로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했고, 트럼프의 잇따른 ‘대만카드’ 활용 시도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중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정부가 올해 처음 발간한 ‘아태지역 안보협력정책’ 백서는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다만,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대통령의 TPP 탈퇴 선언이후 중국의 역내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중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쟁’ 기조가 우세할 것이고, ‘갈등’ 요인도 많아질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와 관여를 위한 전략적 카드, 즉 대만문제와 통상보복 등의 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대만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 견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카드는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미중이 이미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중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중 모두 국내 경제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7년 미중관계는 3월에 예정된 ‘미중 전략경제대화’ 및 올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정상레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는 상호 ‘전략적 불신(Strategic Distrust)’이 존재한 상태에서 지역별·이슈별로 국가이익을 둘러싼 전략적 갈등과 협력이 일상화 될 것이다. 즉, 미중 모두 국내문제의 시급성으로 인해 글로벌 이슈(테러, 환경, 글로벌경제 등)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기조가 우세하지만, 쌍무적 이슈(대만문제, 무역·통상, 사이버안보 등)에 대해서는 전략적 갈등 기조가 우세할 것이다. 다만,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공해전(ASB)’ 전략을 더욱 심도있게 운용할 것이다. 중국은 당분간 현존 패권국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보다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펼칠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문제는 트럼프 시대 미중은 동아시아 세력 경쟁 및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군사거점화 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함으로써 미중 무역통상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중국 봉쇄를 위해 역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 역시 미중 간 협력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책 및 대중국 정책의 추이를 관망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정책이 지속될 경우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보다는 자국이 보유한 경제적 이점과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주변국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트럼프 시대 미중

양국이 역내 안보·경제 현안(남중국해문제, 북핵문제, 무역통상 등)을 연계하여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트럼프 변수’로 인해 북핵문제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외교정책’의 기초하에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슬람국가(IS)와 극단적 이슬람 테러단체를 최우선적 격퇴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강한 군대 재건’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두 가지 국정기조를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북핵문제 보다는 중동문제를 좀 더 중시하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할 경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이 북핵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와 역할 증대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곧 미중관계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작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시대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내·외부 위협’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통일·외교·국방·경제를 아우르는 한국의 국가이익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대미, 대중국 외교원칙과 방향을 정립하여 대외관계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특히 북핵·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역할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반도문제가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및 경제계 차원의 다차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간 북핵 해결과 사드 배치 등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교하고 긴밀한 전략적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 ©KINU 2017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